

디지털자산시장 급락… 비트코인 38%·알트코인 50% ↓

워시쇼크

美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영향
투심 지수 ‘극도의 공포’ 수준
일각선 디커플링 현상 우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디지털자산이 급락했다. 워시 지명자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물로 여겨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달러가 강세 전환한 영향이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38% 하락했고,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약 50% 내렸다.

3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 당 7만778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81% 상승한 가격이지만, 8만 달러 재진입에는 실패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아래로 내린 것은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빙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9개월 만에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9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의 주간 낙폭은 12.29%에 달했으며, 지난해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해서는 38% 하락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의 가격 하락세도 거세다. 디지털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한 주 동안 22.1% 하락했으며, 작년 고점 대비 하락률은 5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총 3위 바이낸스(BNB)는 13.2%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44% 내렸다. 시총 4위 리플(XRP)은 15.9% 하락해 작년 고점 대비 55% 가량 하락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영향이다. 워시 지명자는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매파적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으

〈고점대비〉

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를 선반영했다. 시장 예측을 뒤집은 트럼프의 지명 이후 달러 가치는 빠르게 급등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2일 ‘극도의 공포’ 수준인 15까지 내렸다. 작년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4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발 자금,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안전자산’인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와도 다른 흐름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개월 연속

으로 자금이 유출됐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선은 7만5000달러 선에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험 회피 심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자금이 다른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시장 데이터 업체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흐름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재평가하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투자 리서치회사 가베칼리서치의 루이스 게이브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성장’이라는 타이틀은 인공지능, 귀 금속, 반도체 관련 자산들이 차지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디지털자산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PP-SO 갈등 격화… 방미통위 중재 시험대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안

SO업계, 지급총액 ‘보정율선’ 포함
PP업계 반발… “3년간 775억 손실”
전문가들 제도적 정비 필요성 지적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율선’이 포함되었다. SO 측

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

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한국 떠나는 고액자산가 급증 재계 “상속세 제도 개선 필요”

대한상의 변화 없이 장기간 제도 지속
과도한 부담으로 자본 국외이탈 부추겨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자본의 국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납부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 추산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고,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상속세 부담 확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HBM4 경쟁우위 기업이 수입 유리”

≫ 1면 ‘메모리 가격 올해도…’서 계속

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의 수혜를 누가 더 크게 가져갈지를 가르는 변수로 HBM4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여부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해 시장 내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HBM4에 6세대 10나노급 D램(1c) 공정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기반 베이스다이 등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베이

스다리와 5세대 10나노급 D램(1b) 공

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신 선단 공정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 확대, 초기 수출 저하와 같은 리스크가 있기에 이를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HBM은 D램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HBM 비중이 확대될수록 범용 D램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중 효과로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HBM4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수입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